

與 “실수요자 대출 완화” 부동산 규제 수위조절 검토

무주택자 DTI·LTV 우대 혜택·공시지가 인상률 상한제 등 제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강남 재개발·재건축 공공 주도 고집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상한제 같은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투기 세력을 압박하면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

분에서 정책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국민들의 소망을 풀어주는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실하게 등장했다”며 “당연히 정부와 공공대를 형성하며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

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LTV와 DTI는 40~50%다. 지금도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은 10%포인트를 우대해 LTV와 DTI가 50~60%인데 홍 의장의 발언은 여기서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일관되게 대출을 조여온 정부의 기존 노선과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다. 홍 정

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들어 임대주택, 전·월세, 매매 시장도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주자인 박영선 후보는 한층 강도높은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홍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급격한 인상이나 빠르게 인상이 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며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정부가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방점을 찍은 상황에서 박 후보는 “강남 재개발·재건축은 공공 주도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일부 정책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권자로부터 요구받는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부동산 정책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 대신 나라 전체를 봐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r.연합뉴스



민주, 소속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이근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게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뒷전에 밀린 ‘LH 특검 협상’

여야 재보선 총력전... ‘3+3’ 협의체 후속 논의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여야 ‘3+3’ 협의체가 지난 23일 첫 회의에서 서로 입장차를 확인한 뒤 30일로 일주일의 지났지만, 후속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큰 데다 양당 모두 4·7 재보선을 총력 지원에 나서 실질적인 협상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특검과 관련해선 수사기간부터 여야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최장 90일, 국민의힘은 1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특별법에 따른 제3의 기관으로 조사 주제 선택지가 좁아졌지만, 빠른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이날 선제적으로 전수조사 요청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특별법 논의 상황에 따라 제3

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만큼 협상을 빨리 시작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전수조사는 양당이 모두 응하겠다고 동의한 만큼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국정조사는 국민 눈에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전수조사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데 수긍해 놓고 권익위에 맡겼다”며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하지 않으려는 취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행보, 누군가 기획”

이낙연 “대선 길에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중간중간 누군가 계산한 듯한 행보를 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전망에 대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4·7 재보선을 “성범죄 때문에 치르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야권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윤두사미’ (윤석열과 윤두사미를 합한 말)가 되리라 전망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글쎄요. 가봐야 안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검 “공직자 투기사범 전원 구속”

투기 근절 총력 대응... 전국 검찰청에 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

·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강은미, 다중이용시설 환기관리 강화 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이 30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관리를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실내환기’ 조항을 삽입하고 환기시설의 관리와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아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보강했다.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또 환기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

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감염병 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중화 공사 구간 확정 공고 안내

문수주택단지 배전선로 지중화 확정지역 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중화공사 목적
 - 문수주택단지 배전선로 지중화를 통한 미관개선
2. 지중화 확정지역 : 문수주택단지 464m(도로길이)
 - 주소 : 문수북9길 8(시점) ~ 문수북12길 7(종점)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1.5 ~ '21.10 (5개월간)
4. 신중설고객 지중공급시행 기준일
 -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5. 기타 문의사항 :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 (☎ 061-650-2233)

※ 지중화 확정지역 위치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여수지사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칸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타라즈,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스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판사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